

민주 '박지원 엄호' 검찰 개혁 압박

7개 개혁법안 당론 발의...MB 대선자금 수사 촉구

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검찰총장 국회 출석 등

민주통합당은 23일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의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등 검찰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저축은행 급폭 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과 검찰 간 대치가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든 돈이나 청탁을 받은 바 없다"며 소환 불응 입장을 밝힌 뒤 "증거가 있다면 당당히 기소하라. 저도 당당히 법원에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과도한 검찰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강화를 골자로 한 7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당론으로 제출했다.

우선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지휘 시 서면지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 내부 검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부 담당검사를 반드시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처리 현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예정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허위 사실을 갖고 흡집 내기를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수사) 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 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격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일제히 2007년 이명박 대선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대선자금의 추과 관련해 실토티된 건수가 이미 여러 건"이라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받은 6억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준 3

억원, 신한금융 회장에게서 (이 전 의원이) 받은 3억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줬다고 보도된 30억원"을 거론했다.

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자백도 나오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 정부의 대선자금 수사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는 단서가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 단서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명숙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강창희 국회의장 "여야간 대화 더 하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요청 거부

강창희 국회의장은 23일 새누리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요청과 관련, 가부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여야 간에 대화를 더 하라"고 요구하며 일단 새누리당의 '오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이한성 특위 간사가 잇따라 찾아와 직권상정을 요청한 데 대해 "그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아

무런 보고가 없었다"면서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 안일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간사에게 "지금이라도 (통합민주당) 박영선 간사와 만나라"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특히 "조금이라도 점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법 질차(직권상정)에 따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된

다"고 강조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를 왜 만들었겠느냐. 합의를 하자는 뜻에서 만들었으니까 서로 반발씩씩 물러나 대화를 해야한다"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 간사와 접촉하고 노력해 달라. 필요할 때는 (여야 간사) 둘이 같이 오든지"라며 여야간 대화를 거듭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진보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처리 무산

의총 표결처리 구당권과 반발

통합진보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구당권과 측과 일부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처럼 '제명 의총'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조처에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이·김 의원이 속한 구당권과 측은 의회에서 제명안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복당 안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신·구 당권과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예초 이날 의총은 심상정·노회찬·강동원·박원석·서기호 의원 등 신당권과 의원 5명과 중립성향의 정진후·김제남 의원이 참석하면서 이·김 의원의 제명이 유력해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 불참한 구당권과 6명 중 이상규 의원의 의총 중간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

이후로 제명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 당권과 측이 중앙위에서 비례대표 총사퇴안이나 비례대표 경선을 부정·부실로 판단한 제 1.2차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폐기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의총 참석자 중 중립성향의 한 의원이 소속 의원 전원 이 참석한 가운데 제명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해 제명안 처리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망가지는 것 두렵지 않다"

대선 출마 관련 우려에... "가야할 길이라면 감당할 것"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대선 출마시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나가서 상처받는 것, 망가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 대담자인 제정임 세명대 교수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안 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안 원장은 제 교수가 명예에 큰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자 "나는 (대선에) 나가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열심히 생각해 봤"이라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명예가 훼손되고 상처를 입고 총알 몇 방 맞는다 해도 이 길이 가야 할 길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제 교수는 안 원장의 책이 원고를 넘긴 후 4일 만에 초고속으로 출간된 배경에 대해 "(애초) 7월말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했는데 출판사가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 일주일, 열흘 끌어서 보

안유지에 자신이 없다고 했다"며 "(초고속 출간은) 100% 출판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정치적 시나리오나 계산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언론이 '사실상 대선출마'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일종의 해석"이라며 "언론이 이렇게 책을 낸 것을 보고 사실상 출마라고 해석했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 민간인 사찰·방송사 파업 추궁

국회 대정부 질문

23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다.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적극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박병계 의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의 정점에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다"며 "이영호 전 청와대 고공노사 비서관을 몸통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눈 감고 귀 닫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당사자가 권재진 장관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검

찰 수사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당시 여야 의원, 전직 부총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들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불법사찰 국정조사 범위에 과거 정부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또한, 민주당은 방송사 파업 문제를 적극 거론하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정청래 의원은 "MB(이명박 대통

령) 정권에서 언론인 16명이 해고되고 300명 이상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구제하는 법안을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인 0~2세 영아 전면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한 데 대해 질타했다.

김현숙 의원은 "정부와 여야 합의로 확정된 무상보육에 대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채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경매투자 지분물건등 특수물건
NPL 부실채권

-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주1회 2시간 3개월 스테디
- 교육비 / 임차활동비등 회비있음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수료중 / 평생 무료상담 혜택

무료 공개 강의

제목 : 특수물건 / NPL물건 투자등등
 일시 : 2012년 8월8일(수) PM 8시
 인원 : 선착순 10명(상당후 결정)
 기타 : 교재무료제공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 2번지
 E-mail : csg5000@hanmai.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